4등분 된 바른미래…분당 위기 속 계파 행보도 제각각

당권파 · 유승민계 · 안철수계 · 호남계 나눠져

이르면 12월 중 분당 상황서 계파별 '각자도생'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으로 양분됐던 바른미래당 계파가 당권파-유승민계-안철수계-호남계로 각자도생하는 모습이다.

이르면 12월 중 분당을 앞둔 상황에서 각자의 셈법에 따른 계파별 행보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 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로 유승민-안철수계 15명의 의원은 변혁을 구성했다. 당의 창당 주역인 유승민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서 12월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보수통합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되는 등 변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변혁 내부에서도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의 거취와는 상관없이 '탈당'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들은 12월 신당 창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철수계는 탈당보다는 당비 대납 의혹 등을 고리로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변혁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호남계 의원들과의 정례 모임도 추진했지만 호남계가 손 대표의 신당창당에 대해 손 놓고 있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안철수계의 탈당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리더격인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전체 7명 의원 가운데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비례대표로 손 대표의 출당 조치 없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안철수계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차순위 인사들이 비례대표를 승계하면서 검찰개혁과 선거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승민계는 안철수계의 거취와 상관없이 조만간 신당 창당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선(先) 탈당, 후(後) 세력규합을 하겠다는 것이다.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권파 중 현역 의원은 임재훈 사무총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 2명에 불과하다. 특히 손 대표가 지명한 문병호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주승용 최고위원마저도 회의에 불참하면서 손 대표와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사실상 당권파는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다만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안신당과의 제3지대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당권파 측은 호남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승용 국회부의장, 박주선 의원 등 호남계 내부에서는 손학규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 빈소 찾은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조문한 7대 종단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4당 前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12월3일까지 처리하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를 이끌었던 여야4당 전 원내대표들이 30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며 "정치·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을 중단 없이 처리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4당 전 원내대표들은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임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지한 여야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무엇보다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 지연이나 봉쇄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처리했던 여야4당 전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각자 위치에서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이후 원내대표도 바뀌고 정치적 상황도 바뀌었지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 커졌다"며 "합의처리를 위해 각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는 (4월 합의)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처리가 바람직하다.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취임 후 11번째 기자간담회 "검찰개혁 관련, 고견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취임 후 11번째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개혁 상황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 안팎에서 터져나온 지도부 책임론과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많은 우려를 전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념해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히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다만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들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국민 여론은 무시하고 체면도, 정의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로 군소정당은 의석수를 늘리고 국회를 좌파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실상은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라고 말했다.